제4차 세종 국방 포럼 결과

세종국방포럼

Sejong Defense Forum

2022. 04. 20(수) 10:00~12:00

부국강병의 길
– 방위산업 5대 강국 추진전략

Ⅰ. 발제 **강은호**(방위사업청장)

Ⅱ. 발제 **박준수**(한국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장)

Ⅲ. 종합 토의

세종연구소

발제1.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Ⅰ. 방위산업의 현주소

□ 방위사업의 발전 과정

○ 1970~80년대 국가적 역량 결집, 정책-집행 연결,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중화학 공업 성장

○ 1990~2000년대 국방 분야 전담 사업, 국방부 정책-각군 집행 분리, 방산 중요성 저하 (기업 內 특수사업부)

○ 2006~2021년 타부처/민간참여, 방위사업청 설립, 정책-집행 통합

- 진정한 의미의 방산육성: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 Fast Follower는 우리에게 없는 선진국의 기술을 빨리 포착하여 만들고 전력화하는 것인데, 이는 최첨단 무기를 계속 수입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 즉, 위기 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 ☞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일등 전략 추진

○ 2022년 국가역량 재결집, 軍과 협업 확대 (미래기획, 장비개량), 수출형 방위산업 (선순환 지속성장) ☞ 진정한 의미의 산업으로 변화 시작

□ 방위산업의 현주소

○ 우리나라 방위산업 현황

- 국방 기술 수준: 세계 9위권
- 방산 수출: 점유율 6위
- 방위 산업 규모: 15.4조 원

○ 글로벌 방산시장에서의 강점

- 제품경쟁력: 안정적 국방과학기술력, 높은 가성비, 디지털화, 운용유지 신뢰성
- 국가 경쟁력: 적시에 적절한 정책을 지원하는 정부
- 무기체계 개발여건: ① 사계절 환경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개발 ②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이 가능한 자국시장 규모 (↔ 독일은 기술이 최고임에도 군에서 기술을 운용하지 않아 방산시장이 약함.)

○ 방산수출(협력)의 의미

- 안보동맹 상징: 무기체계를 공유한다는 것은 자국의 생존을 그 나라와 공유한다는 것. 실질적 의미의 동맹은 방산협력에 달려있음.
- 군사력 제공 능력 공유
- K-방산 경로의존: 단기간 내 기술의 일정 부분을 이전해주면 기술수입국은 기술적 만족도를 느끼되 한국에 의존하게 됨.

○ 『방위사업』에서 『방위산업』으로

- 산업化의 필요조건: 복수의 공급자와 복수의 수요자의 자율적 행동을 기반으로 형성된 시장
- 기존의 방위사업: 정부가 기획한 바를 그대로 방산업체가 시행 (=계획경제)

- 산업화를 위한 방위사업에서의 경쟁 도입
☞ 결과: ① 작년 기준 최초로 방산 수출이 수입을 초과 ② 방산업체 스스로 기술 개발에의 참여

Ⅱ. 新 방위산업 비전

[강병] 국방과학기술 5대 강국 *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능력	[부국] 4대 방산수출 국가 * 기술을 제조로 구현하는 능력
☞ High/Medium/Low 방위사업 추진	☞ '수출형 방위산업' 전환

※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기술 개발 → 무기 체계화 → 수출(부국) → 더 나은 기술에의 투자(강병)
☞ 산업화로 인해 부국과 강병이 연계되어 선순환 구조 형성

Ⅲ. [강병] High-Medium-Low 방위사업 추진

□ 투자하는 기술의 유형

○ High-Tech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기술 (선도형)
: First Mover로 가기 위해 필요
- '22년도에 실질적으로 2,664억원 투자 (2019년 400억원 대비)
- 연구개발비의 20%(최대 30%)는 도전 기술에, 80%는 성공 기술에 투자해야 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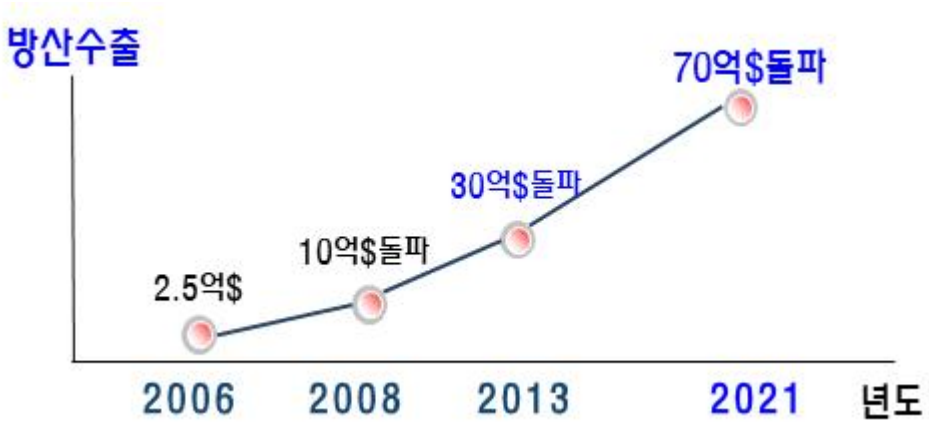
○ Medium-Tech
① 세상에 존재하나 우리는 없는 기술 (추격형)
- 핵심 기술개발: 2018년 2,705억 원 → 2022년 7,668억 원
②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기술 중 확장성이 큰 기술 (성능개량)
- 무기체계 성능개량 R&D: 2020년 2,425억 원 → 2022년 2,045억 원

○ Low-Tech: 노후 기술이나, 군이 장비를 운용 중이므로 보존해야 하는 기술 (운용성 향상)
- 현존 전력 성능 극대화: 2020년 172억 원 → 2022년 2,567억 원

Ⅳ. [부국] 수출형 방위산업 전환

□ 방산수출 성장

○ < '06 이전> 국방획득을 위한 내수 중심 『특수산업』
○ < '06~ '21> 국가적 핵심 『성장산업』
- 국정과제 반영,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



※ 수출형 방위산업 전환 시 변화: 수작업/소량생산 ▹ 자동공정/대량생산

□ 방산수출 확대 방안

○ 방산수출의 핵심 요소

< 여건 >

① 자연기후 조건
② 자국시장
③ 압축성장 모범국가
* K-POP, 시장경제&민주주의 동시성장

+

< Win-Win 요소 >

① 기술력 향상 (R&D 축적)
② 고효율 제작능력
③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지원
* 한국에 기술적 협력성·의존성을 생기게 하는 방법을 국가별로 맞춤 설정

○ 선진국 방산수출 시장 진출 본격화 필요

- 유럽 시장으로 나아가야 함. (예: K-9 자주포로 호주와 협력하여 영국, 독일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음.)
- 미국, NATO 등과 국방상호조달협정(방산분야 FTA) 체결 추진

□ 22~23년 대표적 방산수출 사업 (진행 中)

○ 노르웨이 차기 전차 사업

- 00대 신규 획득(약 2조 원), 12월 업체 선정
- K-2전차 vs 레오파드2 A7: 성능 면에서 동등 또는 그 이상이라고 평가

☞ 선정될 시 방위산업이 민간산업 성장 선도

○ 호주 차기 장갑차 사업

- 000대 신규 획득(약 8조 원), 12월 업체 선정
- 레드백(한화디펜스) vs Lynx KF41(獨, 라인메탈社)

☞ 선정될 시 방위산업 자체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

❍ 美軍 5G망 시범사업

- 0개기지 실증시험(약 1조 원), 삼성 5G 통신장비
- 시범사업: 1조 원(民기술) → 美軍 전체: 150조 원 추정 (국방 적용) → 민간 5G 표준: 수천조원 (民 시장 증폭)

❍ 미국 전술/고등훈련기 사업

- 000대~000대(약 9.6~18.6조 원), 23년 이후
- FA-50(KAI) vs. T-7A(보잉) vs. JAS-39(사브) 등

☞ 선정될 시 경공격기 최강자 지위 → 연쇄적 수출 확대 → 후발국 중 美 전투기 공급 획기적 사례

❍ 美 소형함정용 유도 로켓 사업

- 0만 발(약 3.1조원), 비궁(LIG 넥스원)
- 해외장비 비교시험 사업으로 성능 확인 완료

☞ 선정될 시 美 High-Tech와 韓 Mid-Tech 역할 분담이 실현되는 첫 사례

※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성사시키기 위해 규제와 같은 계획경제 제도에서 탈피하고 방위 '산업'을 부흥시키는 시장의 제도를 발전시켜야 함.

※ 방산 선진국들이 자국 방산시장을 키우고 기술력을 재정비하기 시작. 우리만이 가지고 있던 여건은 2-3년 내 없어질 것. 따라서 2-3년 내에 시장을 개척해야만 대한민국 방산시장이 선진국 대열로 나아갈 수 있음.

발제2.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장)
부국강병과 방산강국의 조건: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발전에 관하여

1. 우리 방위산업, 그간의 발전

□ 주요 개관

자료: 국방R&D 혁신 고도화 추진방안, 제2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방위사업청, 2022. 02.

- K-9 자주포, 기본훈련기 등은 개발된 지 40년, 전력화된 지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세계시장에서 각광 받고 있음. 이는 선진국 못지않은 Best Practice 보유국이라는 의미 ☞ 이제는 다음 세대의 Best Practice를 준비할 시점임.

○ 최근 5년 방위산업 정책 목표

○ 방위산업 주요 지표 (‘06년~ ‘20년)

- 방위사업청의 많은 목표 중 수출과 연구개발 투자는 확실히 늘었음. (증가율 감안 타 부처 대비 빠른 발전)
- 그러나 매출, 고용 등 방위산업 경영 현장에서 작동하는 동력의 증가는 더딤.

☞ 수출에서 얻은 동력이 방산 현장 내 경영자본으로 축적 ·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표		2006년		2020년	
		방산	제조업	방산	제조업
지정방산업체	매출	5.4조원	854조원	15.3조원	1,896조원
	수출(선적)	0.3조원	338.9조원	1.8조원	437.2조원
	고용	2.2만명	247.6만명	3.3만명	412.3만명

지표		2006년		2020년	
		국방	정부	국방	정부
방위력개선사업	R&D 예산	0.9조원	8.9조원	3.8조원	24.2조원
	국내 조달	79.9%	-	83.1%	-
	업체 주관	50.8% (체계개발 사업수)	-	72.2% (체계개발 사업수)	-
	기술 수준	55~86% (업체)	-	80% (종합)	-

□ 방위산업 5대 강국 목표: 방위사업청의 목표

○ 비전: “K-방위산업” 의 세계 일류화로 5대 방산 강국 진입

○ 주요 목표(‘23~ ‘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반영 예정)

- 방위력개선비 국내 지출 90%, 부품국산화율 90% → 방산 매출 연 30조 원 달성
- 국방 분야 신산업 기업 100개 육성, 첨단산업 전문인력 6,600명 이상 채용

○ 추진전략 (주요 과제)

- 수요 창출: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 국가정책사업, 글로벌 가치사슬망 진입 등
- 신산업 육성: 신산업 5대 분야, 방산혁신기업 100, 전문인력/금융/기반 강화 등
- 선순환 생태계: 지역 기반 생태계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보 공유 등

2. 방위산업 5대 강국의 의미

□ 방위산업 5대 강국: 현실의 단면

○ 세계 방산수출 시장의 분포 지형도

- 기존 5대 강국이 강력한 지배력(70~80%) 유지
- 90년대 이후 10위권 안팎의 각축 치열

☞ BIG 5로 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국가들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음. (아래 표 참조)

비중 \ 시기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35%~	미국	소련 미국	소련 미국	소련	미국		
30%~	소련					미국	미국
25%~				미국			
20%~	영국					러시아	러시아
15%~					러시아		
10%~							
5%~		영국 프랑스	프랑스 영국	프랑스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	독일 프랑스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1%~	체코 프랑스 캐나다	독일 체코 스위스 중국 이태리	독일 중국 체코 이태리	독일 중국 체코 이태리 네덜란드	중국 네덜란드 이태리 우크라이나	중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이태리 스웨덴 우크라이나 스페인 스위스	영국 스페인 이스라엘 이태리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스웨덴 한국
0.5%~	이태리	폴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폴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스위스 이스라엘 스웨덴	스위스 이스라엘 체코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캐나다 한국	스위스 캐나다 터키 노르웨이

자료: SIPRI Arms Transfers DB

□ 방위산업 5대 강국, 무엇이 다른가?

○ 압도적인 군사력(재래식 및 전략 무기) 토대로 세계 안보 질서를 좌우
- 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방산 장비의 생산, 판매와 소비, 재생산 메커니즘 작동
- eg. 미국: 해외파병, 해외주둔> 끊임없는 장비 테스트 및 소비> 다음 모델로 이어지는 재생산 구조 작동

○ 과거 세계대전을 치루면서 대규모 국가(산업) 동원 체제를 운영
- 국방이 주도하여 국가 사회적 자원을 성공적으로 결집시켜 운영했던 경험 축적

○ 국가(산업) 동원의 유산을 토대로 공고한 민관군 협동 생태계 작동
-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국방 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예: 미국 국방물자생산법, 응급의료체계 등)
- 국가 안보 정책에 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초당적 협력(bipartisanship)이 이루어짐

○ 끊임없는 국방 개혁 노력 지속, 개혁의 수단으로 혁신 자원을 총동원
- 국방 단독의 노력을 넘어서 국가안보 차원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예: 미국 OT 컨소시엄[1] 등)

1)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이 국방 부문에 진입 시 존재하는 제도적 장벽을 완화해주는 제도. 자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의미.

3. 혁신 생태계의 개념과 특징

○ **혁신**: 일하는 방식(비즈니스)와 삶의 방식의 전환
- **생존의 전략**이 바뀌는 것
- 이를 위해 기술 혁신과 경영 혁신이 필요

○ 기술 혁신 정책의 발전 과정

특징	제1세대 혁신 정책	제2세대 혁신 정책	제3세대 혁신 정책
혁신 관점	선형적 관점	시스템 관점	생태계 관점
정책 목표	산업발전	경제성장	지속가능성, 삶의 질 향상
주요 관심영역	과학을 위한 정책	고용 및 금융 등 산업기반 정책과의 연계	환경, 창업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
주요 참여 주체	과학기술계	과학기술계와 경제계	과학기술계와 경제계, 사용자 및 시민사회

* 자료: 송위진, "기술 혁신 정책의 진화와 과제" STEPI WP, 2012-01.

☞ 생태계가 중요한 시점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을 해야함.
- 생태계: 다수 행위자들이 상호 작용하며 생존과 번영, 진화를 이어가는 관계망
- 혁신 생태계: 혁신을 창출하고 재생산하는 주요 행위자들의 협력 및 역학 관계망
- 생태계의 핵심 조건: ① 시스템 개방성, ② 상호 의존성, ③ 촉진 및 중개 기능, ④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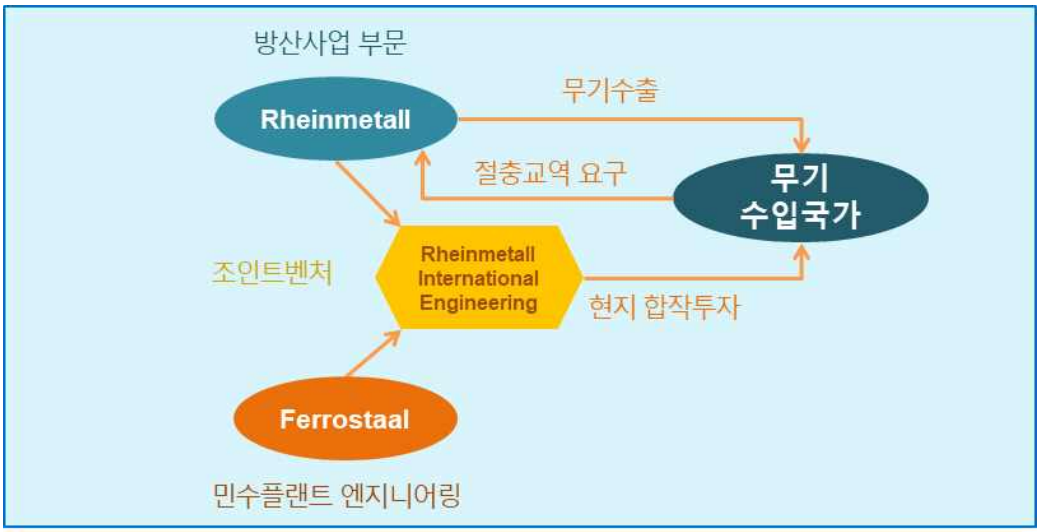
○ 혁신 생태계의 주요 구성 요소
- 시장 수요: 새로운 시장의 확대와 신규 기업의 진입 전망
- 공급 역량: 개방적 협업과 외부의 혁신 역량의 유입 여건
- 중개 네트워크: 혁신적 활동과 산물의 확산 및 환류 메커니즘
- 촉진 환경: 제도와 거버넌스 그리고 문화적 요소

4.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발전: 몇 가지 제언

□ 수요 창출: "국제 협력 및 창업 촉진"

○ 방산 수요 = {국내 군 조달} ∪ **{방산 수출}** ∪ **{국내 민간 시장}**
- 국내 군 조달은 성장 가능성에 한계 내재
- 먹거리가 확장되려면 군 수요 이외의 것들이 창출될 필요가 있음. 수출과 수출 이외의 민간 창업이 중요.
- 국제 방산 협력의 주안점: 공급망 전략, 국방 협력, 민군 B2B 협력, 현지 투자 등
- 특히 민간 창업은 기술 이전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으로 미국의 방산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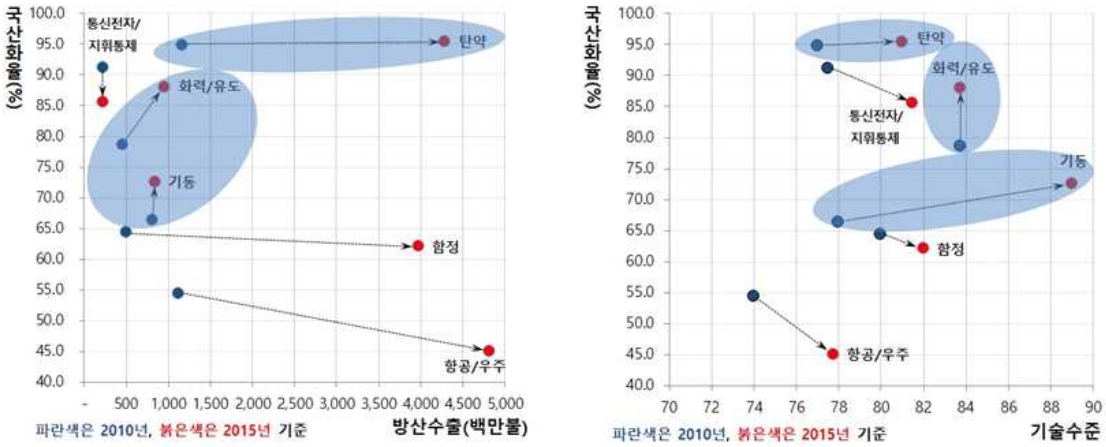
○ 독일의 무기 수출 시 현지 합작투자 추진 사례



자료: 다음 원문을 인용, 재구성. "Gernman Joint Venture Signals Big Changes in European Defence Industrial Base", RUSI Analysis, 2013.

: 무기 수입국의 절충교역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산업체와 민수 플랜트 엔지니어링 회사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현지 기업과 투자 제휴로 사업 진행

□ 공급 역량 확대: "부가가치 창출 및 공급주권 확보"



* 자료: 방진회, 방위산업체 경영분석; 기품원, 국방기술수준조사 등을 인용하여 재분류 및 분석함

<방산물자 국산화율과 방산수출의 변화 관계>　　<방산물자 국산화율과 기술수준의 변화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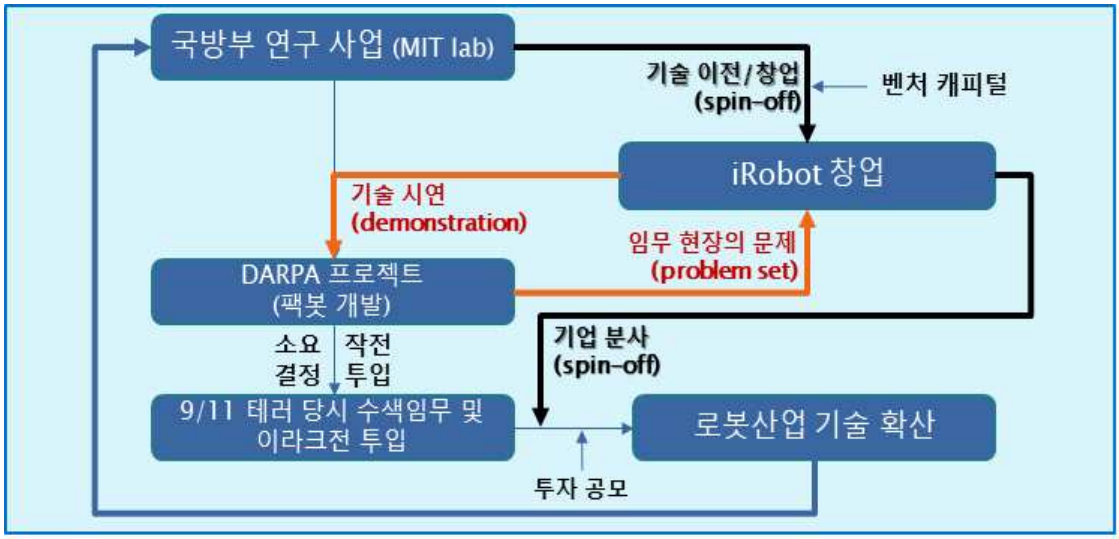
○ 음영처리 된 분야(기동, 화력/유도, 탄약)는 수출도 올라가고 국산화율, 기술수준도 올라간 것.

○ 새로운 생태계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항공/우주, 함정)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이 필요

- 현행 국산화율(조달비율)은 부가가치 및 기술자립도 등 진단에 한계점 내재
- 국산화율 중심의 방위산업 정책이나 방산수출 지원은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는 미흡
- 산업안보와 기술패권의 시대에 대외 취약성 극복이 중요함. 그런 점에서 국산화 정책도 부가가치와 공급주권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략적 역할 확대 필요

□ 수요와 공급의 상생: "adapt & accept"

○ 대표 예시: iRobot 팩봇 개발 사례



* 자료: Linda Weiss, *America Inc.: Innovation and Enterprise in the National Security State*, 2014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

☞ 핵심은 주황색 사이클의 순환(**문제 ▸ 기술 시연**) → 신속한 소요 의사결정
- iRobot사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로봇산업 기술 확산, 생태계 번식
- 글로벌 호크, MRAP 개발 등도 비슷한 방식; 최근 우리 AI-X 프로젝트도 유사

□ 중개 및 연결망 구축: "확산 및 순환"

-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국방 전략 관점에서 의도된" 기술 이전과 상용화 정책을 구사

○ 주요 예시: 미국 국방부 '갈륨 비소 반도체' 제작 기술 상용화 정책
(자료: Linda Weiss, 2014 문헌에서 인용)
- **(개요)** 군사용 레이더에 사용되는 마이크로파 집적 회로 제작의 핵심 기술
- 군사용 통제 기술이기 때문에 군용 외에 다른 수요가 없고 제작비용이 고가
- 군용 수요를 늘리거나 비용을 보조하는 방법은 지속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 **(정책)** spin-around 방식
- 민간 기업에 기술 공개 → 상용화 → 시장 확대(기술 활용: 자동차 충돌방지, 항공 운항통제 등) → 평균 제조단가 하락 → 군사용 레이더 제작비용 절감
☞ **[강병 → 부국 → 강병]의 선순환 구조**

※ 군사 기술의 이전 및 상용화 정책은 "의도된" 전략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필요 : 산업 육성 정책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 파급과 기술 확산을 토대로 국방 목표 달성에 필요한 효과를 창출**하고 그 결과가 **국방 목표에 다시 환류**될 수 있어야 함.

□ 환경 쇄신: “분류 장벽을 넘어서”

○ 문제 인식: 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정보화 등으로 구분된 국방 전력발전 분야는 각각 고유한 기획관리 요건과 절차를 엄수 → 융복합 혁신의 동력이 소실될 우려

○ 개선 방향: 획득 단계 이전에는 체계 분류 구분없이 기술 관점에서 사업 기획 및 기술 시범 → 적용 체계의 분류 기준은 획득 단계 이후에 적용

※ 신기술 분야의 시범 및 연구개발 예산은 별도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

종합 토론

○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의 개념적 구분?

- **(강은호 청장)** 방위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루어지는 것이지만 방위산업은 스스로 투자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적 행위자에 의해 시장이 형성되는 것임.

○ 시간, 비용, 시행착오가 족쇄가 됐는데 청장이 되고 나서 구애받지 말라고 했다.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 **(강은호 청장)** 일등 전략 하에서 시간, 비용, 시행착오에 대한 규제는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나, 모든 기술을 high-tech 급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바 모든 규제를 풀면 안 됨. 선도형:추격형=20:80의 비율이 적정

○ 혁신을 하려면 각기 이질적인 개체들 사이 조화가 핵심. 방산 생태계에는 방사청, ADD, 방산업체, 국방부, 각 군 기참부서, KIDA, 기품원 등 다양한 행위자가 있는데 이들 사이 제도적 조율이 선행되지 않으면 혁신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 **(박준수 실장)** 서로 모여서 one team이 되는 것이 핵심. 앞서 언급하였듯 시범사업이나 혁신사업은 기획관리를 독립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안. 혁신 말고 이미 하고 있는 기획 행정의 경우 각 기관 사이 고유 업무가 있다 보니 많은 제약이 있음.
- 분석평가의 전면적 쇄신이 필요함. 현 분석평가는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 물론 장점도 있으나 각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혁신의 속도와 원동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큰바 제도적 개선이 필요.
- Cross-functional한 조직이 필요. 가령 현재 수많은 조직이 AI 하겠다고 하지만 각자의 계산법으로만 이야기할 뿐 원팀이 되지는 못함. 우주 팀, AI 팀 등 조직을 아우르는 전략기술 단위의 팀이 나오면 좋을 것으로 보임.

○ 방산기업의 입장에서는 부국강병의 길보다도 여전히 생존의 길을 고민하는 처지에 있음. 작년 방산업체 전체 영업이익률이 2.58%. 탄약 분야는 그나마 6%로 고도화되어 있으나, 함정 분야는 -4.14%, 작년은 -6.79%.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곧 기업이 상선에서 번 돈을 가지고 특수선사업부를 유지한다는 것임. 특수선사업부의 일이 없으면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 상선으로 사람을 보냈다가 일이 생기면 다시 불러오는 구조임. 이로 인해 기술 수준은 답보하거나 퇴보. 그러나 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고도화된 기술임. 이 갭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고정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 방산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임.

- **(강은호 청장)** 너무 심한 감사 제도의 개선도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방안 중 하나
- 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청이 작년, 재작년 최선을 다해 나라마다 레버리지로 삼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고 국방부, 합참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있음.

○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꾸는 것이 혁신이 아닐지?

- **(박준수 실장)** spin-off를 잘하면 돌고 돌아 군으로 돌아오는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 spin-on은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 소극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데 Spin-on만 강조되는 것 같아 아쉬움. 우리가 의도적으로 spin-off를 시키고 이것이 spin-on으로 전환될 수 있는 연결고리의 기술정책이 있으면 바로 시행해볼 수 있을 것임.

○ 실제 국방 관련 사업 기획·추진 시 민간 과학 기술 전문가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 **(강은호 청장)** 방위사업청 출범 시 두 가지 조치를 취함: ① 방추위(방위사업추진위원회) 내 국회 추천 인원과 민간 인원이 투자예산 관련 등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 ② 모든 사안을 법규 행정을 기반으로 추진. 과거에는 조 단위 사업도 훈령으로 진행되어 행정부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으나 이를 차단해버린 것임.
- 즉, 방위사업청의 출범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방위사업법에 업무 기반을 둠으로써 국회와 국민의 통제가 가능케 했다는 측면에서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하였음.
- 현재 최초 기술 기획 단계부터 상향식(botton-up) 방식으로 민간 기술자들의 의견을 묻고, 선정하는 최종 위원회에도 민간 기술진이 참여하고 있음. 다른 나라의 경우 기획 단계 때 미래 전장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화가나 영화감독도 참여. 우리나라 또한 감당해낼 수 있는 행정관리 능력이 전제된다면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으면 함.
- **(박준수 실장)** KIDA의 예를 들어보면, 하나의 과제 시 수많은 심의와 정교한 절차적 평가가 이루어짐. 그것이 누가 봐도 투명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배경은 이사회 때문임.
- 이러한 측면에서 국방 분야에도 최고 의사결정자 중심의, 법률에 기반한 이사회가 있다면 그런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미 민간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보다 공개적으로 보고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보고서 작성: 김세원 연구원

※ 글의 내용은 발표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세종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제4차 세종 국방 포럼 결과

Sejong Defense Forum

세종국방포럼

세종연구소